

2. 정책 동향

□ 정책 이슈: 한미간 통상 마찰 움직임

- (내용) 99년 들어 한미간에 통상 마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미국 측의 WTO 제소, 슈퍼 301조 부활 등으로 수출 확대 전략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 1월 25~26일의 한미간 통상 실무회의에서 미국은 철강, 쇠고기 등과 아울러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 문제로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은 98년의 외환 위기로 인한 통상 압력 유예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에 따라, 미국의 통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외환 위기 이후 경제 회생의 기반을 수출에서 찾으려는 입장에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정부에게 정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무분별한 단기 자본 거래가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단기 자본 이동에 대한 세이프가드(1월 25일 한미통상현안협의時 외교통상부 당국자 발언)는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다만 통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에 전념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증가하는 무역 적자를 방관할 수 없는 클린턴 정부는 EU 및 동아시아 지역에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되지 못함
 - 한국의 98년이 '금융 위기의 해'였다면, 99년은 '무역 위기의 해'-데일리 美상무장관-가 될 것이라는 표현으로 對한국 통상 압력을 본격화할 움직임임
 -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임

<한미간 통상 관련 견해차의 주요 내용>

	구 분	한 국	미 국
투자 협정	외환 거래의 일시적 제한 조치(safe guard)	도입 불가피	도입 반대
	스크린 쿼터제도	장기적으로 축소	폐지
철강	국내 조달시장	문제 없음	WTO 정부조달협정 위반
	대미 수출 금증	자율적 조정	수출 자제 요청
	포항제철 민영화	정부 개입 없음	정부 개입 의혹
	반도체 WTO 판정	WTO 결정에 따라야	상소 가능성
	쇠고기 수입 쿼터	수입 쿼터에 대한 책임 없음	수입 쿼터 이행 요청

□ 정부 정책 동향 (1. 30~2. 7)

<p>재정경제부(1.30): 기업 퇴출 관련법 개정안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 3개의 개정 법안을 확정하여,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시행할 계획 - 회사 정리나 화의 신청 이후 6개월 이상 소요되던 회사정리 절차 개시 결정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
<p>한국은행(2.1): 99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용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급격한 통화 환수 대신, 총유동성(M3) 증가율을 98년과 비슷한 13~14%로 유지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콜금리 수준을 5%대로 하락 - 또한 집계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M3의 단점을 보완한 '代用 M3'를 개발할 예정
<p>환경부(2.1): 자원 재활용 시행 규칙 개 정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15일부터 음식점, 백화점, 숙박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연간 4,000억 원의 1회용품 시장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될 전망
<p>금융감독위원회(2.2): 충북은행에 합병 명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차례의 정상화계획 이행 촉구 및 800억 원의 증자를 이행하지 못한 충북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 조흥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이 합병 대상으로 유력
<p>건설교통부(2.3): 예산 조기 집행 계획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고속전철, 인천국제공항, 지하철 건설 등에 집중 지원하여 경기 부양과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 - 99년 공공투자사업 예산 12조 6,000억 원 중 91.4%에 해당하는 11조 6,000억 원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
<p>건설교통부(2.4):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100평 이상의 건축물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규정을 폐지 - 용도지역별 최소 대지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자투리 땅에도 대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
<p>한·일 양국(2.5): 어업협정 실무 협상 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입어 조건 등 주요 어업종별 어획량 및 어업 조건에 대해 합의
<p>기획예산위원회(2.5):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현재의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가 아니라 예산 집행이 가져온 성과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또한 '정부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p>건설교통부(2.6): 그린벨트 해제 시기 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할 12개 기준에 환경평가를 추가하여, 상반기 중에 평가를 실시한 뒤 7월에 발표 - 따라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보전녹지에 묶이는 지역이 늘어나 해제 면적이 예상보다 축소될 전망

(곽 용 선 yskwak@hri.co.kr ☎724-4058)